

무안 찾은 盧대통령 “서남권 개발 레일 깔겠다”



29일 무안을 방문한 노무현 대통령이 승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오찬에서 인사말을 통해 서남권 개발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광주전남신문기자단

“목포~ 대불산단 삼학대교 조기 착공”

노 대통령이 29일 마음먹고 전남에 선물 보따리를 풀어냈다. 비록 임기말에 내놓은 선물들이어서 임기내에 해결을 볼 시간이 촉박하다는 우려가 뒤따른다 하더라도 29일 무안을 방문한 노무현 대통령이 제시·약속한 여러 사업들은 ‘정치적 결정’이 아니고서는 풀기 어려운 난제들이어서 그 의미가 크다. <간척지문제 해결되나>=이날 노 대통령이 이준 가장 큰 선물 보따리는 J프로젝트 사업부지 2천942만 평(간척지 2천226만평, 육지 716만평)은 농림부장관 면허로 한국농촌공사에 매입해 농림부 소유 상태다. 전남도는 J프로젝트 입안 단계부터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간척지를 무상양도 또는 매입시 정부의 예산지원을 요청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성원가에 장기저리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 특히 이날 노 대통령의 발언은 지난 24일 청와대에서 열렸던 서남권 발전 구상 보고회에서 낙후지역의 토지이용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지시한 데 이어 두 번째 나온 것. 따라서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가 실렸다는 점에서 J프로젝트에 추진에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해남군 산이면과 영암군 삼호읍 일대 사업부지 2천942만 평(간척지 2천226만평, 육지 716만평)은 농림부장관 면허로 한국농촌공사에 매입해 농림부 소유 상태다. 전남도는 J프로젝트 입안 단계부터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간척지를 무상양도 또는 매입시 정부의 예산지원을 요청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성원가에 장기저리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 그러나 소유자인 농림부는 무상 양도·양수는 불가능하며,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의한 개발계획 승인후 사업시행자에게 감

정가격으로 유상양도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따라서 29일 노 대통령의 지시 이후 간척지 양도·양수문제 해법찾기가 초기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지속적인 인프라 확충>=노 대통령은 목포 삼학도에서 영암 대불항을 잇는 3.11km의 대불산단 진입도로(삼학대교) 건설도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인 해수부·건설부 등이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국비 2천억원으로 건설되는 삼학대교는 2007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2008년 이후 사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었다. 이 공사가 마무리되면 운송거리 단축으로 주변 산단 약산도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 현재 4선석으로 운영중인 목포신외항도

국비 2,000억원 투입...2008년 공사 착수 목포 신항·무안공항 활주로 확장도 지원

“굳었던 마음 확 풀렸다”

노대통령 ‘임기 발언’ 하루만에 국정수행 강한 의지... 노 대통령이 “굳었던 마음 확 풀렸다”고 말했다. “전날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특히 노 대통령은 “오랜만에 친구를 만난 것 같고 고향에 온 것 같은 포근한 느낌을 받는다”며 “굳어있던 마음이 확 풀릴 만큼 아주 편안하게 저를 맞이해 주셨다.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전효숙 파동’과 여·야의

공세에 극도로 위축된 노 대통령이 호남에서 정치적 위안을 받고 자신감을 되찾은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노대통령은 또 김대중 정권과의 인연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국민의 정부 시절 국가경제의 체질을 완전히 바꿨다”며 “김 전 대통령이 기업·공공·노사·금융 4대 부문 개혁을 했다면, 이 제도적 혁신 위에서 질적 혁신을 더 쌓아가는 것이 참여정부의 전략”이라며 정권의 연속성을 부각시켰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與 분열 가속화

당·청 “마이 웨이”...친·반노 분당 가시권

노무현 대통령의 당적 포기 발언을 계기로 당·청간 결별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여당내 통합신당 추진파와 친노(親盧) 그룹 양쪽에서 분당론이 확산되고 있다. 여권 내 분화 조짐은 고건 전 총리와 민주당 등 여당 밖의 움직임과 맞물리면서 정치권 새판짜기 논의가 급류를 탈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당·청은 낯선 감정을 드러냈다. 우선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은 지난 28일 우리당 비대위원들이 심야 회의 통해 재차 노 대통령에게 ‘정치에서 손을 떼고 국정에만 전념할 것’을 요구한 것과 관련, “대통령은 정치에 전념한 일이 없다”고 정면 반박했다. 이에 대해 우리당 내부에서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이병완 비서실장 등 청와대 참모진의 퇴진 등을 거론하는 등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다. 여기에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도 “민심을 복속심으로 삼고 오직 민심에 복종하는 정치를 약속한다”고 밝히며 더 이상 청와대를 의식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당·청간 낯선 대립 양상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당내에서는 분당론이 확산되고 있다. 통합신당파 의원들은 “일부 급진세력과 함께 할 수 없지 않느냐”며 친노 그룹을 겨냥했다. 희망 21 대표를 맡으며 통합신당을 주장하고 있는 양형일 의원은 “우리당 의원 139명이 다 같이 갈 수도 없고, 그렇게 가셔도 안된다”며 “정책적, 이념적 차이가 분명했던 분들을 갈라설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해 사실상 분당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참여정치실천연대 대표로 친노 그룹으로 분류되는 김형주 의원은 “여지도 같은 당에 앉아서 서로 총질하기 보다는 원만한 냉각기를 갖거나 합리적 동의에 의해 결별하는 것이 훨씬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당·청간의 결별은 물론 여당의 분당도 사실상 가시화됐으며 이제 시기 문제만 남은 상태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분당의 시기로는 정기국회 폐회 직후에 논의가 시작돼 내년 2월 전당대회 이전에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여권이 요동치면서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의 발언이 정계개편을 촉진하는 쪽으로 작용해 대선권이 근본적으로 흔들릴 가능성을 예의 주시하면서 경계심을 나타내고 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탈당과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촉구하며 여권 흔들기를 계속하고 있다. 정계개편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이화영의원 “하야 까지 고민” 윤태영대변인 “하야 의지 없어”

盧대통령 ‘임기 발언’ 논란... 열린우리당 이화영 의원은 29일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 발언’과 관련, “대통령이 참모들과 하야(下野) 수준까지 논의한 적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대통령의 고민의 강도가 그만큼 깊다는 것이고, 참모들과의 논의 과정에서 수위조절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같이 밝힌 뒤 “노 대통령이 스스로에 대해 ‘하야’라는 표현을 쓰진 않았을 것이고, 이런 상황이라면 결단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것”이라며 “어제 국무회의에서의 발언에도 하야를 검토한 국안스가 포함된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얘기를 청와대 참모들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노 대통령이 ‘하야’ 표현을 검

위기가 닥쳤는가? 목숨걸고 혁신하자. 파워혁신! 임팩트를 두려워하는 강인한 정신력으로 무장하라! 생각을 바꾸면 길이 보인다! 불가능은 없다, 도전하라! 기업체/개인 파워혁신 강연회. 문의/신청 (02)501-9407,3046